

여성정책 국내동향

2019년 5월 1차 (2019.5.1~5.16)



주요 현안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전국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중 10년 이상 한국 거주자가 2009년 15.6%에서 지난해 60.6%로 크게 증가해 장기 정착 경향 뚜렷
- 장기 거주로 한국 생활 적응력은 높아졌지만, '도움·의논 상대가 없다'는 비율은 늘어나는 등 사회관계망 부족
- 심화자녀 또한 학령기 비율이 증가하여 청소년기 자녀 양육의 중요성 증가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5.02]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42

2019 청소년 통계 발표

🔗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의 인구·건강, 학습·교육, 여가·경제활동, 안전·행동, 사회참여·의식 등을 다룬 「2019 청소년 통계」 발표

- 청소년의 96.2%는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
- 2017년 청소년 절반 이상이 인권존중과 다양성 인정에 긍정적으로 인식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5.0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38

스쿨미투 근절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실시

🔗 여성가족부는 스쿨미투(학교 성폭력 등 학교미투)와 관련하여,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인 각급학교 4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운영 관련 현장점검 실시 예정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5.13]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57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등에 대한 국가승인 통계 첫 번째 발표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의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실태 등에 대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2017년 기준) 발표

- 이번 조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해 이 조사를 국가승인 통계로 전환한 뒤 처음 실시된 것임.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05.16]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15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발족

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현행 출생·가족·양육 관련 법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사회구조 및 국민인식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예정

참고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2019.04.30.]
http://www.moj.go.kr/viewer/skin/doc.html?rs=/viewer/result/bbs/182&fn=temp_1556613690412100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9-05-01	사망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사망신고를 하도록 하여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2019-05-01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의원 등 10인)	2019-05-01	개명허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에 있는 경우에는 개명허가 자체 금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2019-05-02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아이돌보미를 영구적으로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명시하는 한편,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 범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여 기존의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 인력을 관리 및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가 최근 2년 내에 3회 이상 자격 정지 받은 경우 3년 이내 범위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다시 지정 받을 수 없게 하여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며, 매년 정기·수시로 아이돌보미 평가 및 실태점검 모니터링 의무화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여 기존에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아이 돌보미의 관리·감독 문제 해소

가족·돌봄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등10인)	2019-05-02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며, 인적사항과 돌봄 경력을 비롯한 자격제한 이력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제공토록 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보호자의 만족도 제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2019-05-07	건강보험상 요양급여 실시 기록이 없거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등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서비스의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보호조치 시행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이완영의원 등 13인)	2019-05-10	우리도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2019-05-13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적정한 보육비용 지원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2019-05-16	아이돌보미의 주의의무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되 주의의무가 아이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와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기관에 대해서도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아이돌보미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며,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중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소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강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0인)	2019-05-16	무상보육을 위한 인건비 지원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시설에 관계없이 보육교사의 보수를 제대로 책정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아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빈곤율이 높은 조손가족의 양육부담 감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부모 가족으로 지원되는 대상자 중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으로 명시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일·생활 균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익동의의원 등 10인)	2019-05-07	가족돌봄휴직과 가족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단기간의 가족간병휴가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 지원
건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1인)	2019-05-10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자가 그 발생 사실 및 조치내역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건강 보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4인)	2019-05-10	임산부가 자유롭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모유수유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유수유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 도모
여성 노동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2019-05-13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정책의 실수요자인 여성농어업인의 의견과 제안이 자문회의에 직접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2019-05-09	여성가족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근거 마련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2019-05-14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난임 등의 문제 해결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며,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위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 마련

젠더 폭력· 안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1인)	2019- 05-03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2인)	2019- 05-0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의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아동과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2019- 05-03	경찰관서의 장은 가정폭력의 재발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우려가정의 가정폭력행위자 및 혐의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예방에 기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2019- 05-03	임시조치 등의 청구 요건에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이 위험에 처해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접근금지에는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현재 위치로부터의 일정거리를 포함하도록 하며, 위험성 조사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 근절 도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20인)	2019- 05-03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2019- 05-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성폭력범죄의 정의 규정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음란물 유포죄를 추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엄격한 법적용 도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2019- 05-07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촬영대상자를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9- 05-08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등을 신설하여 마약을 이용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을 제4조의 특수강간에 준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아동성보호 등의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제외한 성매매알선 범죄자(제18조~제20조 위반)를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포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2인)	2019- 05-0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의 치료프로그램을 참조하여 현행법에 재범방지교육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유죄판결 및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처벌과 함께 100시간 범위에서 재범방지교육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2019- 05-10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수사과정상 신뢰관계자 동석 여부에 관한 사항의 강제성을 명시화하고자 함. 다만, 동법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을 금하는 피해자 자율선택의 단서는 변경하지 아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2019- 05-10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2차 피해 방지 도모



보도자료

✎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노동시장 내 성 격차 해소 등 성 불평등한 사회구조 개선 통한 저출산 대응 필요(2019.05.07.)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5월 8일 주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저출산, 온라인 성폭력, 낙태죄 폐지 등과 관련해 우리사회 전반의 성 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성평등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힘.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의 전환 :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에 의의 향후 정책과제로 재생산권으로서 임신중단 권리의‘인권’명시 필요(2019.05.09.)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모든 국민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를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함.

✎ 젠더폭력정책의 통합적 추진 기반 마련과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실현 위한 해법 모색(2019.05.15..)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2주년 성과와 평가 : 젠더폭력정책을 중심으로”에 대한 제116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함. 이번 포럼은 정부의 지난 2년 간 젠더폭력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젠더폭력으로부터 더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and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

참고자료

- <http://kwdi.re.kr/plaza/bodoView.do?p=1&idx=124095>

참고자료

- <http://kwdi.re.kr/plaza/bodoView.do?p=1&idx=124094>

참고자료

- <http://kwdi.re.kr/plaza/bodoView.do?p=1&idx=124127>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보도일	매체명	헤드라인	링크
제116차 양성평등정책포럼	2019.05.15	연합뉴스	"젠더폭력" 정책대응은 성과, 가정폭력 관련 노력은 미흡"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5163200005?input=1195m
	2019.05.15	아시아경제	문재인 정부 2주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정책' 성과 점검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51508393702053
	2019.05.15	아주경제	여성정책연구, 文정부 2주년 '젠더폭력정책' 성과 및 과제는?	https://www.ajunews.com/view/20190515093527238
	2019.05.16	오마이뉴스	"문 대통령, 젠더 폭력에 단호한 대처 표명해" 평가 나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723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19.05.17	여성신문	[강남역 사건 3주기] "젠더폭력 근절" 앞장 선 문재인 정부, 가정폭력·성착취 문제 대응은 부족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664
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정책과제 토론회	2019.05.10	MBC	[뉴스터치] "완전한 '임신중단권' 보장하도록 법 개정돼야"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282398_24616.html
	2019.05.10	중앙일보	"프랑스, 청소년·저소득층 낙태 비용 전액 지원" 낙태죄 개정 첫 정책 토론회	https://news.joins.com/article/23463364
	2019.05.09	내일신문	"임신중지 시기결정시 여성권리 침해 안 돼"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12584
	2019.05.09	연합뉴스	"완전한 임신중단권 보장 담야 법개정 나서야"	https://www.yna.co.kr/view/AKR20190509122100005?input=1195m
	2019.05.09	아시아경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50910212418833
	2019.05.09	아주경제	여성정책연구, '9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정책과제 논의	https://www.ajunews.com/view/20190509084119827
	2019.05.09	뉴스토마토	"낙태죄 개정안, 처벌보다 권리 보장에 초점 맞춰야"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94253
	2019.05.10	베이비뉴스	"재생산권으로서 임신중단 권리, '인권'으로 명시해야"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376

주요 연구자 언론활동

보도일	매체명	헤드라인	연구자	링크
2019.05.13	한겨레신문	광고 속 여성이 달라졌다	이수연 선임연구위원	http://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893736.html
2019.05.11	한국일보	똑같은 박사인데... 여성 3800만원 vs 남성 5600만원 '커지는 연봉 격차'	김난주 부연구위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100803350193?did=NA&dtype=&dtypecode=&prnewsid=
2019.05.09	한겨레신문	대통령만 '페미니스트' 주장...성평등 정책 의지는 안 보여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93180.html#csidxf8467fccd35bec4a979f6e94a1cfe7

유관기관 동향

온라인 성폭력 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법 개정 및 대응방향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유형, 그리고 피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처벌과 규제에 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

참고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제4호]
https://www.kic.re.kr/pubdata/issue/List.jsp?pageIndex=1&ntt_id=11402&searchKeyword=&hid_searchKeyword=&tagforsearch=all